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25
----------	-------

발의연월일 : 2025. 4. 25 .

발 의 자 : 문진석 · 이건태 · 강준현
안태준 · 윤종균 · 이재관
이정문 · 이연희 · 복기왕
이춘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요구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지자체 원인부담으로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본선은 국비를 지원받는데 비하여 연장노선은 비용의 전부를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망 건설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간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3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비용부담의 특례 등) ①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에 운영중이거나 사업이 확정된 철도노선(이하 이 조에서 “기존 철도노선”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조에서 “철도노선 연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2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은 기존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부담 비율에 따른다.

1. 기존 철도노선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 추정금액(철도노선 연장사업비에 기존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21조의2(비용부담의 특례 등)</u></p> <p><u>①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에 운영중이거나 사업이 확정된 철도노선(이하 이 조에서 “기존 철도노선”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조에서 “철도노선 연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2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은 기존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부담 비율에 따른다.</u></p> <p><u>1. 기존 철도노선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u></p> <p><u>2.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 추정금액(철도노선 연장사업비에 기존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u></p>

	<p><u>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u></p> <p><u>② 제1항에 따른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u></p>
--	---